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6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15일

발 의 자 : 황인구,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 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
 (110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정책 강화와 국제기구나 인접 국가 등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함
-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성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을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오염수 방류는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협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내부에서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 정부의 반대 의견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전개되지 못했음
- 더욱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삼중수소 농도를 희석해서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겠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바다에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총량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반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수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서 바다는 인류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 등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 나. 기타 : 해당 없음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을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협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에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시된 4,011건의 의견 중 오염수 방류를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바도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했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외교부 성명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결의안 이송,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무시되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번 해양방출의 핵심은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처리,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에 있다. 그러나 도쿄 전력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ALPS를 거친 저장 오염수 110만 톤 중 72%가 여전히 정부가 정한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희석 방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와 영향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온화한 기후의 유지와 식량·에너지의 공급, 지구 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 서울특별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한다.

넷,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